

김태년 “靑 투기 전수조사 못 믿겠다면 국회가 검증할 수도”

“의원 전수조사시 ‘중립·객관적’ 기구에...野와 협의”
“LH 특검이 시간끌기? 오히려 野선거 이용 아쉬워”
“野 특검·전수조사 수용 다행...국정조사도 협의 착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또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 감사 청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그 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의견

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수용 여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수조사 후 명단 공개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히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도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범위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의 투기 수사에 대해서 (“특검 출범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인데, 특검 가동 전까지 현재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한 후)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LH 특검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겠냐”라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고 특검도 내가 제안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행은 이어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는가”라고 받아넘긴 뒤 “오히려 야당이 최근 보인 행태를 보면 LH 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분노가 있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국민의 허탈감,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 “다 같이 갈 수도,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LH 국정조사 제안 수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와 관련해서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내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민 의견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5일 전남도와 전남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순천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남도와 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소 의원은 ‘예타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역사의 지중화 또는 ▲도심으로 들어오

는 노선구간 우회(약 5km) 등 순천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2차관과도 긴급히 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한 경위를 확인

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의 요구사항을 건의한 바 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투기 의혹 14일만에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령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만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의 발언을 열었다.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남민심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담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련의 LH 사태 파장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고려도 반영됐다.

안철수 “야권 후보단일화 후 국민의힘과 합당”

‘통합선대위→합당→범야권 대통합’ 3단계 제시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당대표가 1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전제로 국민의

힘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

과 합당 계획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안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권 대통합의 진정성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저는 야권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다”며 “야권 구성원 전체를 통합의 용광로에 한데 모아 녹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며 “양당 합당의

기반 위에서 3단계로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고두보를 반드시 놓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 몸이고 원팀이다. 저는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선대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연립시정을 완성하고,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밑알이 되겠다”며 “더 큰 2번을 반드시 만들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고두보를 놓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단일후보로 선출 안 되더라도 대통합을 위해 합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예, 그렇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냐’는 여론의 공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드루킹 아바타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